

부산항만공, 시로 크레인 고장 예측... 'K-해양 시벨트' 조성

해수부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 선정 27억 투입해 와이어로프 결합 진단 부산항 5개 부두서 현장 실증 추진 항만·조선·국방·문화 AI생태계 구축



와이어로프 진단장비 부착 대상물인 부산항 내 항만크레인장비들. /뉴시스

부산항만공사의 항만하역장비 안전관리 인공지능(AI) 기술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실시 중이다. 공사는 또 해양산업의 AI 대전환(AI)을 견인하게 될 'K-해양 인공지능 벨트' 조성 사업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이 목적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항만크레인 와이어로프 안전관리'를 위한 AI 기반 예측진단 및 운영지원 서비스 상용화' 기술이다.

정부 측 지원금 1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27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2개월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공

는 시제품 제작 및 현장실증 확대 운영 등의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그간 항만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관리는 육안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져 내부 결합 식별이나 돌발 고장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기술은 자기진호 기반 진단장치와 AI 연산 기술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잔존수명까지 정확히 예측해 내는 게 핵심이다. 또 계속된 데이터와 크레인 운전 조건, 유지보수 이력을 융합해 분석하고, 자동리포트 및 경보기능

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정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 실증 대상 장비 선정과 부두 운영사 협조 체계 수립 등 현장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개발사인 ㈜엔키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통합운영체계 개발 등 제품화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부산항 부두운영사 중 참여의향을 회신한 5개 부두를 대상으로 현장 실

증을 추진한다. 또 해당 기술을 먼저 적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검증된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부산항 현장 적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정부 지원사업 선정이 부산항 현장에 우수한 기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 및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우리 공사가 해양항만 분야의 AI 기술 국산화를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산과 성장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K-해양 AI 벨트'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부산시티호텔에서 'K-해양 AI 벨트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국방·항만·조선·국방·문화 등 해양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게 골자다. 국내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 AI 중심 거점을 구축하는 대형 전략프로

젝트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해양 AI 벨트 종합계획 수립 ▲국방·항만·조선·문화 4대 분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 사업 발굴 ▲인재·창업·인프라 해양 AI 벨트 종합생태계 조성 전략 기획 등을 추진한다.

송상근 사장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긴밀히 협업해, 부산항을 AI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전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시대에 해양산업 역시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인공지능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광역시, 국가AI전략위원회(지역특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민국 해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대기업 CVC, 벤처 '데스밸리' 넘긴다

공정위, 지주회사·CVC 운영 현황 대기업 절반 지주사, 재무건전성 개선

대기업집단 내에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상징하는 '지주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자금난을 겪는 초·중·기 벤처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며 벤처기업들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자금조달 고비)' 극복을 돕는 모험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2개 중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50개)보다 1개 늘어난 수치다. 대명화학, 한국콜마,

오리온, 희성이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인적분할되면서 삼성에프스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신설해 체제에 변화를 줬다.

지주회사 중심의 구조를 갖춘 '전환집단'은 47개로,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들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9억 원 증가한 반면, 평균 부채비율은 법률상 한도(200%)를 크게 밑도는 39.3%로 전년(43.7%)보다 4.4%p 낮아졌다.

지주회사의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일반지

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이 중 76.9%(10개사)가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됐다. 포스코기술투자,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13개 CVC가 운용 중인 투자조합은 총 85개다. 특히 지난해 신규 설립된 15개 투자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 원으로, 국내 일반 VC 평균(160억 원)을 64.4%나 웃돌았다. 새 조합에 납입된 투자금(805억 원) 중 65.2%(525억 원)를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출자했다. 대기업 내부 유보금이 CVC라는 통로를 통해 벤처 활성화 자금으로 성공적으로 수혈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긍정적인 대목은 투자 자금의 '질'이다. 지난해 CVC가 집행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939억 원으로 전년(2451억 원) 대비 소폭 줄었지만, 당장 자금 수급이 절실한 업력 7년 미만의 초·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오히려 눈에 띄게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동 청렴 선언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남부발전, 부산 공공기관 청렴경영 선도

부산 공공기관 '청렴라이브'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과 손을 잡고 청렴 문화 정착과 윤리·인권 경영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퍼스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인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청렴라이브(LIVE)'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웨이브 참여기관 임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관 간 윤리경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을 상호 공유하는 한편, 최근 공공부문에서 중

요성이 커진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윤리·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역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본 행사에서는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꽃을 함께 꽂아 하나의 꽃바구니를 완성하는 '청렴 꽃 피우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기관들은 이어 진행된 공동 청렴선언문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다졌으며, 청렴 특강과 판소리 공연 등 문화 콘텐트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KIAT "동남권, 글로벌 첨단제조 거점 도약"

부산서 5극3특 전략포럼 개최 부산·울산·경남 성장엔진 육성 논의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인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첨단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3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동남권의 미래 성장엔진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동남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동남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첨단제조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학회,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앵커기업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부딪히는 애로사항, 기존 산업과 성장엔진의 차별점,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3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동남권)을 개최했다. /KIAT

육성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KIAT 변동철 지역혁신부원장은 "지역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도로공사, 주택편입 후 남은 마당·화단 보상

권익위 의견표명 적극 수용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후 남은 마당과 화단이 공부상 지목이 다르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해 민원인과 손실보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만 편입되고 마당·화단만 잔여지로 남은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

목·지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1992년부터 해당 토지를 주택 마당과 화단으로 일체하게 사용해 왔음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민원인 A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